

서문

한미관계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코리아게이트가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의 대미 로비, 그리고 도를 넘어선 로비가 미국에 알려진 1970년대 후반 2년간은 한미관계가 사상 최악이었다.

박정희 정권의 대미 로비는 미국으로부터 주한미군철수 연기, 미국의 한국군 현대화 지원 등 군사원조와 경제원조 확대, 박정희의 반민주적 정치행태에 대한 미국의 양해를 얻기 위해 미국의 입법부와 행정부, 특히 의회를 설득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에서 하나의 정치행위로 합법성을 인정받는 로비에 그친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규정된 매수행위가 개입됐다. 생존을 위해서 미국에 잘봐달라고 로비를 했고 로비가 더 잘 먹히도록 하기 위해 돈을 뿌린 것이다.

이때 로비스트로 박동선이 활동했다. 김한조도 로비스트로 거론되지만 사실 그는 연극으로 따지자면 주인공도, 조연도 아닌 지나가는 행인 정도의 배역이었다. 박동선은 쌀 이권의 이면에 정계 실력자, 특히 한국과 관련된 정책결정 당사자들이 있음을 꿰뚫어보고 한국 정부에 쌀 수입을 이용한 로비를 제안한 뒤 쌀 이권을 독차지하며 한국과 박정희를 위한 로비를 펼쳤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쌀 이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로비의 상당 부분을 할애한 것도 사실이다. 김한조는 한국 정부로부터 100만 달러를 받았지만 청문회와 재판 증거자료를 보면 상당 부분을 착복했고 로비활동은 거의 없었다. 그동안 박동선의 역량은 다소 과소평가되면서 요령 좋은 쌀장사 정도로만 치부됐고, 김한조는 나라를 살린 희대의 애국자로 과대평가된 듯하다.

1976년 말 한국의 대미 로비가 폭로된 뒤 1977년부터 1978년까지 2년간 하원 외교위의 프레이저 소위원회, 하원 윤리위원회, 상원 윤리위원회 등이 코리아게이트를 직접 파헤쳤지만 이외에도 상원 처치 위원회, 상하원 정보위원회 등이 개최한 청문회도 코리아게이트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 한다.

국내에는 김형욱 등을 집중 조사한 프레이저 소위원회 조사내용이 조금 알려졌을 뿐 박동선 등을 조사한 상하원 윤리위원회 활동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한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의 정치헌금을 조사한 처치 위원회나 중앙정보부의 미국 내 활동 등을 조사한 정보위원회 조사내용은 아예 금기시됐었다.

이 시기 박정희 정권의 잘못 중 하나는 미국의 청와대 도청에 대한 대응이었다. 박정희의 통치 권위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에 국내에서는 쉬쉬했지만 증거와 증언을 살펴보면 도청이 있었음이 틀림없다.

당시 한국은 미국의 사활이 달린 월남전에 2개 사단을 파병하고 있었다. 닉슨이 한국에 주둔 중인 7사단을 철수시켰기 때문에 미국은 박정희가 월남전에서 한국군을 철수시키지나 않을까 걱정했다. 그래서 청와대 도청을 감행했고, 로비를 알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월남전에 대한

박정희의 깊은 뜻을 알기 위해 청와대를 도청했다. 그러나 박동선의 대미 로비가 덤으로 포착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창피스러운 것이었다. 미국에 청와대 도청 여부를 따지기는커녕 제발 도청이 없었다고 부인해달라고 매달렸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미국에 근무하던 한국 공직자들의 망명과 미국 잔류가 잇따랐다는 사실이다.

공작 실패 등에 따라 망명한 중정요원 김상근, 손호영, 또 이 건과 관련돼 한때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중정요원 김용환, 이영인 등을 제외하더라도 공보관장을 지낸 이재현은 1973년 '요상한' 정치망명을 하며 코리아게이트의 불씨를 당겼다. 정인식, 김영호, 한혁훈, 김성한, 정규섭, 임기서, 강경구 등 한국 귀임 발령이 나면 미국에 살기 위해 사표를 내는 외교관들이 줄을 이었다. 일부는 영주권을 받기 위해 한국에 불리한 증언도 서슴지 않았다. 김형욱, 이후락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해외근무는 모든 공직자가 선망하던 자리였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 최대 수혜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나라를 버렸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든 것이다.

수많은 사건이 뒤엉킨 코리아게이트였지만 엄격한 보도통제로 국내에 그 내용이 제한적으로 알려졌고 그나마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았다. 잘못 알려진 내용이 있다면 이제 바로잡아야 할 때다.

1986년 서울대에서 한미관계연구회에서 프레이저보고서라는 제목으로 프레이저 소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를 번역한 책을 냈다. 프레이저보고서가 3개 청문회 보고서 중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부분별로 한미관계의 흐름을 가장 세밀하게 정리했기 때문에 한글판은 그 자체로서 소중한 자료였다. 상하원보고서가 의원 로비에 대한 조사결과만을 담았다고 한다면, 프레이저보고서는 로비의 배경까지 소상하게 정리한 한미관계 백과사전이었다.

하지만 이 책을 살펴본 결과 약 460페이지의 원문 보고서 중 170페이지 정도, 즉 3분의 1정도는 빠져있었다. 역자 스스로도 서문을 통해 일부 내용은 제외시켰다고 밝혔지만 아마도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뺐 것 같다. 그러나 제외된 부분 중에는 김형욱, 김기완, 이재현 등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당시 여건상 3분의 2만 번역해서 출판하는데도 온갖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이제는 나머지 3분의 1은 물론 그 부속 책자, 상하원 윤리위보고서와 부속 책자 등이 모두 알려져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잊혔다가보다는 묻혀 있는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이들 위원회의 보고서보다는 청문회에 제출된 증거 자료를 최우선적으로 살펴봤다. 그 다음으로는 청문회 선서 증언들을 체크했다. 속기록에는 김형욱, 박동선, 김한조, 김상근, 손호영은 물론 키신저의 증언까지 수백 명의 증언이 수록돼 있었으므로 매우 유용했다. 물론 '보고서'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보고서는 1차 자료들과 조사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므로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기에 1차 자료에 중점을 둔 것이다. 프레이저보고서도 460페이지 분량이지만 증거 자료와 증언 속기록 등을 담은 부속 책자만 10권에 4천 페이지에 육박했다. 말하자면 보고서는 전체를 10분의 1로 요약한 것이요, 그 요약분도 청문회의 입장에서 선별한 것이다. 상하원보고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증거와 증언을 중심으로 당시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참고했다. 그리고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보관 중인 국무부 외교전문, 당시의 외신보도, 워싱턴포스트 기자의 회고록 등을 살펴봤다.

학자처럼 코리아게이트의 내밀한 의미까지 날카롭게 분석해내지 못했음을 고백한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 그리고 잘못 알려진 사실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